

황당한 5·18 어린이 체험학습관

‘무료 입장’ 말 뿐 준비물 없인 헛걸음

‘진암군 죽여라’ 등 비교육적인 게임

‘눈물 벽화’ 낮은 온도선 작동 안돼

개장 한 달을 맞은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어린이 체험학습관이 재구설을 못하고 있다. ‘무료 입장’이지만 체험학습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전 준비 없인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체험학습실에 마련된 일부 교재와 게임의 경우 어린이 눈높이에 맞지 않고 비교육적인 언어 사용이 많아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

면 지난달 2일 개장한 어린이 체험학습관은 연면적 468㎡의 규모로 ‘5·18 영상 홀’과 ‘여기는 7080 대한민국’, ‘관화 체험 및 꽃 만들기 체험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게임장’ 등 10여 개의 체험시설과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 체험학습관은 당초 국립5·18민주묘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해 5월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교육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관화 및 꽃 만들기 체험학습실의 경우 관화지·전지·가위·철사 등 각종 준비물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전 준비 없인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

특히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게임의 경우 조반부부터 ‘진암군을 죽여라’ 등의 안내멘트와 함께 진암군 복장의 군인들을 손가락으로 때려잡도록 유도, 어린이들에게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5·18 민중항쟁 당시 피와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벽화에 손을 대면 피와 눈물이 사라지도록 설계된 벽화의 경우 25도 이상에서만 변하도록 돼 있어 낮은 온도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와 함께 체험학습관이 예약이 많거나 관람객 수가 적을 경우 사실상

개인 관람을 제한해 ‘반쪽짜리’ 어린이 체험학습관이라는 지적이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어린이 체험학습관의 경우 참여 형 체험학습관이 만큼 체험이 필요한 각종 준비물은 개인이 준비해 오는 게 교육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 이 같이 운영 중”이라며 “개인 관람 제한은 정원이 꽉 찼을 경우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문을 연 어린이 체험학습관(총사업비 8억5천만원)은 5·18 민주정신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관람객들이 자유와 민주·인권에 대해 보고 듣고서 공동체 의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립5·18민주묘지내 역사의 문 지하 1층에 건립됐다. 지난달 말까지 5천555명이 다녀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 암마시술소

성매매 23명 적발

다른 사람 명의로 암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주와 구매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지난달 30일 암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2)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속했다. 또 김모(24)씨 등 여종업원 3명과 성 구매자 19명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장천동의 4층짜리 건물에 시각장애인 박모(40)씨 명의의 Y암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김모(35)씨 등 19명에게 화대비 명복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여종업원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뒤 소개비 명복으로 화대비의 50%를 받아 행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건물 1층과 승강기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엔 경보용 전등을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광주 서구민의 날 축제 행렬

제15회 구민의 날 기념 ‘행복 서구 축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상무시민공원 종합운동장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기장행렬 및 퍼포먼스를 하며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금채권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

광주고법 첫 판결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도 공익(公益)채권에 해당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지난달 30일 K중공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고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회사인 K중공업을 대신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채권은 공익채권”이라며 “이 채권 회수는 미뤄지면서 생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공익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1월 법원이 K중공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리자 이 회사 근로자 52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뒤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6월부터 2년여간 K중공업으로부터 4천 500만원을 받고 2억6천만원을 추첨했는데, K중공업은 “임금채권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도 포함해 부당하다”며 청구의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2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뒤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6월부터 2년여간 K중공업으로부터 4천 500만원을 받고 2억6천만원을 추첨했는데, K중공업은 “임금채권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도 포함해 부당하다”며 청구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목포수수협은 법원의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거쳐분’에 대한 본인 소송과 조합장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최씨는 지난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인정 거쳐분을 받았다.

최씨는 “수협 이사회가 부실 조합원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선거 면밀 전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로 당선되는 ‘존재’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수수협은 법원의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거쳐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중앙회의 부실 조합원 정비 지침과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박탈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조합장 선거 과정의 잘못을 지적한 일부 조합원들이 목포수수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 목포수수협도 이촌제작 등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 정상화를 위한 대처대회를 여는 등 극심한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다.

개인-한백경·서만재씨, 단체-한산춘

제3회 ‘오월 어머니상’



한백경씨
서만재씨



활을 하면서
5·18의 진실
을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
지 않았다.

결핵 전문
의 여성숙

(여·92·무안

군 삼항면)

선생에 의해 설립된

한산춘은 5·18 민중항쟁 직후 투

옥에 모친 고문의 후유증으로 제

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희생자들

을 위해 장기요양은 물론 무상 치

료를 해주는 등 혁신적인 노력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5월 당시 무선

사를 운영하며 광주의 소식을 전

하려는 시민들에게 각종 음향기

기기 무상으로 빌려줬다. 한씨는

이때문에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서씨는 1980년 5월 당시 무선

사를 운영하며 광주의 소식을 전

하려는 시민들에게 각종 음향기

기기 무상으로 빌려줬다. 한씨는

이때문에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서씨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진암군에 맞서 싸우

다쳐 끌려온 시민군들의 소식

을 부상자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죽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 군 전역 후 스페인에서 유학생



‘사기’ 경찰신문 기자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허위 입대자 계약서를 제출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모 경찰신문기자 유모(3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 8월 24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원룸 건물에 입주한 것처럼 가짜 입대자 계약서 7부를 꾸민 뒤 법원에 제출, 건물주 김모(30)씨의 채권자 이모(48)씨에게 5천60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2급 폐선박 해체 간 큰 고철도록

○…고철을 수집
하기 위해 바다에
떠있는 폐선박을
불법으로 해체한 ‘간 큰’ 60대 고철 수
집업자에게 경찰신문기자 구속했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폐선박들을 불법 해체한 이모(60)씨를 해양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선박 해체할 때는 기름을 14일부터 최근까지 영광군 염산면 앞바다에서 72급과 24t급 등 폐선박 2척을 무단 해체해 고철로 팔아넘기려 한 혐의”라며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월산동에서 72급 폐선박을 불법 해체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해 목포수수협은 법원의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거쳐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중앙회의 부실 조합원 정비 지침과 규정에 속한 수령자 195명이 포함됐다. 광주교도소에서는 25명의 모범수들이 가석방 된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목포수협장 선거 갈등 법정 비화

당선무효 소송·‘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제기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를 놓고 빚어진 당선인 측과 일부 조합원들이 목포수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 목포수협도 이촌제작 등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 정상화를 위한 대처대회를 여는 등 극심한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목포수협에 제명 처분을 냈지만 조합원은 이를 거부해 당선인 측이 당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은 법원의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거쳐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중앙회의 부실 조합원 정비 지침과 규정에 속한 수령자 195명이 포함됐다. 광주교도소에서는 25명의 모범수들이 가석방 된다.”

/연합뉴스

앞서 조합장 선거 과정의 잘못을

지적한 일부 조합원들이 목포수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 목포수협도

이촌제작 등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 정상화를 위한 대처대회를

여는 등 극심한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목포수협에 제명 처분을 냈지만 조합원은 이를 거부해

당선인 측이 당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은 법원의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거쳐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중앙회의 부실 조합원 정비 지침과 규정에 속한 수령자 195명이 포함됐다. 광주교도소에서는 25명의 모범수들이 가석방 된다.”

/연합뉴스

앞서 조합장 선거 과정의 잘못을

지적한 일부 조합원들이 목포수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 목포수협도

이촌제작 등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 정상화를 위한 대처대회를

여는 등 극심한